

제15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21. 8. 25.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21년 8월 25일

2. 회의방식 : 온-나라 PC영상회의

3. 출석위원

은 성 수 위 원 장

도 규 상 부위원장

박 정 훈 위 원

김 용 재 위 원

정 은 보 위 원

위 성 백 위 원

4. 회의경과

(14시 00분 개회)

가. 개회선언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함

- 1) 2021년도 제14차 금융위원회 회의록과 제2차 금융위원회 임시회의 회의록, 제3차 및 제4차 금융위원회 서면회의 회의록, 제5차 임시 및 제15차 금융위원회 안전검토 소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 ☐ 2021년도 제14차 금융위원회 회의록과 제2차 금융위원회 임시회의 회의록, 제3차 및 제4차 금융위원회 서면회의 회의록, 제5차 임시 및 제15차 금융위원회 안전검토 소위원회 회의결과를 서면 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2) 의결안건 심의

- ☐ 의결안건 제281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혁신기획재정담당관이 내용을 설명함

※ 금감원 감독분담금의 상한기준과 감독·발행 분담금의 환급기준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추가분담금 징수의 법적 근거를 명확화 하는 내용

- (위원) 분담금이 다른 업권과의 상관관계가 있을 텐데 자산운용사 규정을 이렇게 새로 바뀌도 괜찮은지, 금융권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보고자) 분담금 징수 개선(안)에 대해 의견수렴을 4월에 했음. 두 차례에 걸쳐 전체적인 환급액 변화뿐만 아니라 업권간의 형평성까지도 다 의견수렴을 했으며, 공식적으로 이견이나 문제제기가 없었음. 동 개정령안은 금융업권과의 충분한 협의에 의해 나온 결과라는 점을 말씀 드림.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 (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282호 『한국산업은행의 국가채무보증신청에 대한 의견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산업지원팀장이 내용을 설명함

※ '22년에 발행하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의 채무보증 필요성과 타당성에 관한 내용

- (위원) 채무보증규모(한도)를 40조 원으로 하면 40조 원대로 의미가 있고 10조 원으로 하면 10조 원대로 의미가 있음. 어떻게 보면 종식된다는 의미도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자체가 긍정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지만 또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검토소위원회에서 지적인 대로 우선 꼭 필요한 것만 10조 원을 하되 만약 상황이 안 좋아지면 추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설명을 해

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83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중국ETF의 국내 등록·판매를 허용하는 내용

○ (위원) 안전검토소위원회 때 구체적인 내용은 다 검토했음.
내용에는 이견이 없으나, 이해를 돕기 위해 시행규칙과 규정
에 답을 개정내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람.

○ (보고자) 당초 시행규칙을 통해서 중국의 경우에는 교차판매
를 허용하되 ETF에 한해서 허용하는 내용으로 보고를 드린
바 있음. 다만,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시행규칙에서는 중국펀
드의 등록을 허용하는 내용만 담고 중국의 경우에는 ETF에
한정한다는 내용을 감독규정에 담는 것이 법체계상 적절하
다고 판단하여 당초 보고 드린 것과 조금 다르게 감독규정
까지 같이 개정하게 되었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84호 『(주)KB국민카드 등 2개사의 신용정보업 예비 허가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감독국 금융데이터 보호팀장이 내용을 설명함

- ※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정 신정법에 따라 (주)KB국민카드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 CB를 허가하고 크레파스솔루션에 대해서는 비금융정보CB를 예비허가 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85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 유예 요청 관련 처리방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감독국 금융데이터감독팀장이 내용을 설명함

- ※ '21.12.31일까지 기존 마이데이터 API의무화 기간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고 그밖에 행정제재를 부과하지 않는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86호 『다스법률비용보험(주)의 해산결의 인가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 다스법률비용보험(주)의 해산결의를 인가하는 내용

- (위원) 법정분쟁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변호사로부터 조언을 받는 등 법률서비스에 대해서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가 바로 법률비용보험 같음. 이것이 다른 나라, 특히 독일이나 미국, 일본에서는 매우 성황리에 발전된 것으로 알고 있음. 이 다스법률비용보험(주)이 독일계로 알고 있는데,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사업에 실패하여 해산하게 됐는지 그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람.
- (보고자) 우리나라 손해보험에는 비용보험이라는 것이 있음. 비용보험은 실질적으로 상품, 소송비용, 기타 비용 등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보험임. 그런데 다스법률비용보험(주)에서 영위하는 보험은 그중에서 법률비용만 담보하고 있음. 그래서 다른 손보사에서 영위하고 있는 비용보험에 대해서 상품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음. 또한, 자동차보험이나 기타 운전자상해보험 특약으로 법률비용 특약을 판매하고 있음.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발생하는 법률비용 등을 일반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기 때문에 다스법률비용보험(주)의 상품이 상품 경쟁력 측면에서 우리나라 상품과 비교가 되지 않아서 영업력이 약화되었고 이로 인해 철수하는 것임.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87호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제288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전부개정규정 승인안』, 제289호 『한국거래소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위

원회 자본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스팩(SPAC) 제도 개선,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정비 등을 목적으로 한국거래소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90호 『하나금융투자(주)의 (주)케이원제13호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사후 출자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
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하나금융투자(주)가 인수과정에서 취득한 (주)케이원제13호위탁
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에 대해 사후 출자승인을 심사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91호 『(주)나인대부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등록일 이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대부업
자의 등록을 취소하는 내용

○ (위원) P2P업체가 내일('21.8.26)까지 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

데 지금 영업 안 하는 곳도 많을 것 같음. 이 업체는 따로 무슨 일이 있어서 검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검사를 하면서 나온 것인지? 그리고 등록이 안 되어 있는 P2P업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항상 걱정이 되었던 부분인데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는지?

- (보고자) 이 조치는 이 업체만 한 것이 아님. 2018년 3월에 대부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P2P연계대부업자의 금융위 등록이 의무화되었음. 그 이후에 금감원에서 2019년 상반기까지는 투자자보호를 위해서 P2P업체의 사기·횡령 혐의를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사법당국에 고발통보 조치를 함. 그 이후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 하반기까지는 차주들로부터 P2P업체가 최고금리를 초과해서 이자를 징수한다는 민원이 제기되어서 최고금리 준수 여부라든가, 대부 계획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게 되었음. 그 이후에 투자자나 차주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낮고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거나 고정사업장이 미비된 56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일제점검을 나갔음. 그래서 지난 7월22일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등록취소 조치를 한 바 있고, 이 (주)나인대부의 경우에는 등기우편을 발송했는데 송달이 안 되어서 절차가 지연되어 이번에 조치를 하게 되는 것임. 두 번째 여쭙어보시는 것 중에서 등록이 안 되는 업체에 대해 말씀은 하셨는데, 8월26일까지 온투업 등록 기간이 유예되어 있음. 27일부터는 온투업이 시행되고, 그렇다면 등록을 안 한 업체들은 신규영업이 중단 되게 됨. 따라서 이런 미등록 업체들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금융위가 협의하여 일부 대규모의 큰 업체에 대해서는 파견 감독관을 파견하고 있으며, 투자금 회수나 투자자에 대한

자금 집행 등과 관련하여 감독관이 자금이 유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음. 나아가서 미등록 P2P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정상채권에 대해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를 통해서 등록된 온투업체로 대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함께 개발해서 시행하려고 준비 중임.

- (위원) 8월26일까지 등록을 하기로 했는데 제 기억에는 처음 3개사를 하고 그 다음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적극행정을 해서 일부 다시 등록을 받아서 일부는 된다고 기억을 하고 그래서 중간에 금융위원회를 열면 등록을 인가해 준다고 했던 것 같음. 만약에 내일이 시행일이라면 오늘이 마지막 금융위인데, 그렇다면 원래 예상대로 등록이 된 것인지 아니면 등록이 지체된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 것인지? 아까 일부 계획을 설명해 주셨는데 이 진행상황이 무리 없이 잘 안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도 소비자보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인지?
- (보고자) 사실 이 등록 부분은 저축은행감독국과 금융혁신과에서 주관하는 사항인데 현재 77개사의 P2P업체가 있는데 40개 업체가 온투업등록 신청을 했음. 그중에 9월말까지 36개사 정도가 등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월에 3개사가 등록이 되었고 7월에 4개사 그리고 오늘 다른 안건을 통해 21개사가 온투업 등록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릴 예정임. 그리고 9월 중에 일부 서류가 미비된 곳들은 그런 것을 보완해서 8개사를 등록할 예정이어서 총 36개사가 현재 등록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92호 『부산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특수은행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부산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확인된 ‘감독당국 보고의무
위반’ 등 위법사항에 대하여 기관 및 임직원에게 대한 신분제재
및 과태료 부과조치를 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93호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특수은행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확인된 ‘감독당국 보고
의무 위반’ 등 위법사항에 대하여 기관 및 임직원에게 대한
신분제재 및 과태료 부과조치를 하는 내용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을 진술함

○ (진술인) 한국산업은행 검사부의 정성욱 부장임. 본건 제재
에 대한 당사의 의견을 제가 먼저 진술하고 모자라는 부분
은 법률대리인이 부연설명 하도록 하겠음. 첫 번째, 현지 감
독기관 제재 보고의무 위반으로 은행법 및 은행법 시행령에

따라서 하나의 제재가 부과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핵심 쟁점은 과연 국외점포에 대한 현지 감독기관의 과태료 부과와 과연 은행법 시행령 상에서의 제재에 포함되느냐 하는 문제 하나하고, 설령 과태료 부과가 제재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금융사고와 유사한 은행의 주요변동 사유가 될 수 있느냐는 문제임. 첫 번째 문제로써 2019년 8월에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금융감독혁신방안에 의하면 기관제재의 대체 수단으로 양해각서 등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되어 있음. 여기에서 양해각서가 제재가 아니라면 당연히 과태료도 제재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이 당사의 생각임. 두 번째, 은행법 제47조를 보면 주요변동사항이 정관변경, 자본금의 감소, 본점의 타 시·도 이전, 국외점포 신설, 사후변경 등인데 과연 감독당국 보고의무를 어겼다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주요변동사항과 유사한지, 그러한 주요변동사항에 포함되느냐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려움. 결론적으로 국외점포의 보고서 작성오류 또는 지연제출 등으로 인하여 현지 감독기관의 과태료 부과 자체는 한국산업은행의 건전경영을 해칠 우려도 없을 뿐더러 예금자 등 은행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재를 감경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안건을 말씀드리겠음. 두 번째는 감독당국 보고의무 위반,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과 국외점포 제재에 관한 보고 위반에 따라서 저희 은행 앞으로 기관주의 조치가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작년 5월13일자 개정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본건은 기관주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이 또한 작년 8월 금융감독혁신방안에 의거해서 검사대상 금융기관 및 임직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기관

주의에 대한 조치요건이 강화되었기 때문임. 그러면 개정된 금융감독 규정상 조치체계를 보면 다음과 같음. 일단 위법 부당행위로서 금융기관의 건전경영을 훼손하거나 금융기관 및 금융거래자에게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영업 또는 업무의 일부정지가 되는 것이고, 영업 또는 업무의 일부정지의 사유에 해당되나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기관경고가 되는 것이며, 기관주의는 기관경고에 해당되나 정상참작 사유가 크거나 경미한 경우에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다시 말해서 기관주의 조치를 하려면 결국은 그 전제조건으로 기관경고에 해당되어 그러한 위반행위가 당사에 건전경영을 훼손하거나 금융거래자에게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할 것임. 이 점을 한 번 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바임. 마지막으로 행위시점의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느냐, 개정 후 규정을 적용하느냐는 올해 시행된 행정기본법 제14조에 명확하게 나와 있음. 규정개정으로 인하여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라면 수범자에게 변경된 법령을 적용한다고 명확히 되어 있기 때문에 본건은 작년 5월 시점에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면 기관주의 조치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세 번째 개인신용정보 삭제 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겠음. 2018년 12월까지 개인신용정보를 다 삭제하라는 금감원의 지침이 있었고 당사는 노력을 했음. 그 와중에 당사는 차세대시스템을 개발 중이었고 그 사이에 당사는 정보삭제를 위하여 금감원 담당 검사역과 5차례 유선통화하고 4차례 E-mail을 통한 수시협의를 하였음. 따라서 금감원 담당자는 개인신용정보 삭제가 불가능한 점에 대해서 충분한 인식과 이해가 있었음. 당사는 이것을 믿고 차세대시스템의 개발이 끝나자

마자 2019년 7월에 기간이 경과한 신용정보 전체를 삭제처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제재에 들어온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 두 번째, 과태료 부과기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음. 금감원에서는 불가항력이었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를 고의에 의한 것이라 판단하여 위반행위의 동기를 '상'으로 결정하였는데 당사는 고의로 삭제를 지연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그 동기는 '고의', '중과실'이 아닌 '하'로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며 그 결과도 이런 행위의 언론 공표로 인해서 공신력 실추라든지 금융거래자의 피해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그 결과는 '경미'가 맞다고 판단함. 네 번째, 지급보증서 관련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음. 8건 중에서 1건은 당사 직원들이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대출약정서에 보증제한 문구를 미기재하였음. 승인신청서 상에는 보증제한 경우를 명확히 했기 때문에 사실상 감독규정을 어겼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우며 참고적으로 당사는 지급보증서 담보여신 관련해서 연대보증으로 어떤 한도를 초과해서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한 사실 또는 대리변제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진술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인진 변호사임. 이미 실무부서에서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보완하는 취지의 간단한 말씀만 드리겠음. 우선 국외점포 보고의무 위반 관련해서는 은행법과 금융기관 검사규정상에 보면 제재 및 금융사고에 관한 규정이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야 될 것인데 은행법 제53조에서 얘기하고 있는 제재의 종류에는 과징금·과태료가 빠져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과징금·과태료

받은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할 의무가 없다고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점과 금융기관 검사규정상에서도 제17조, 제18조, 제19조에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따로 규정하면서 제20조에 와서 별도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해서 정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의 제재와는 구별해서 판단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음. 그리고 지분 20% 이상 취득과 관련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보고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특수한 대출임. SPC에 대한 대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주식을 담보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담보성격이 매우 약하다는 점과 신디케이션론의 경우에는 여러 복수의 대주와 차주들이 엮여있기 때문에 실제로 개별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취득한 담보가 2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점도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람. 그리고 지급보증서 담보여신에 대한 연대보증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는 사실 은행 내부적으로는 지급보증서에 의해서 담보되는 것을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만 담보운용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 여러 자료로 분명히 나타나 있음. 다만, 이 부분이 대출약정서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 부분에 대한 지침으로 보면 대출약정서에 반드시 그 부분을 기재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은행의 내부전산이라든가 여신 신청서 등에서 그 부분이 분명하면, 그리고 그 이후로도 지급보증서 담보 부분까지도 책임을 지라고 하면 여신운용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제재를 정함에 있어서 충분히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함.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한국산업은행에서 4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중에서도 차세대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정보 삭제 부분에서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와서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신뢰보호 의무에도 어긋나지 않느냐고 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한국산업은행 주장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자) 먼저 개인신용정보 삭제의무 위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삭제와 관련해서 금감원 실무자의 양해가 사전에 있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저희가 이 건을 적발하게 된 계기는 다음과 같음. 금융회사의 신용정보 관리의무를 집중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는데 금감원의 신용정보평가실에서 2017년도에 273개 금융회사를 상대로 전체 개인신용정보 삭제 여부 관련된 서면점검을 실시한 적이 있음. 그때 한국산업은행을 포함해서 63개사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제대로 이행하도록 지도를 한 번 했음. 그리고 2년 뒤인 2019년도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했더니 여전히 한국산업은행 등 20개사가 이행을 안 하고 있었음. 그래서 신용정보평가실에서 저희 검사국에 통보를 했고 저희가 검사를 나가서 다시 점검을 하게 된 것임. 아까 차세대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불가피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법에서 차세대시스템 구축 같은 경우는 예외적인 이유로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외적인 사유에 있어도 매년 이익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음. 차세대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꼭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삭제하는 것이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더 필요한 것이냐를 검토하게 되어 있는데 전혀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그래서 저희들은 불가피하게 지적할 수밖에 없었음. 그리고 두 번째 국외점포의 현지 감독당국

으로부터 제재 관련해서 이것이 보고 대상이냐고 주장하고 있는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정의에서 보면 제재란 ‘금감원의 검사결과 등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에게 대하여 금융위 또는 금감원장이 이 규정에 의하여 취하는 조치’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음. 그리고 검사 및 제재규정 제4장제1조 조치의 종류 및 기준에 보면 종류에는 제20조에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가 명백히 명시되어 있음. 그래서 과징금과 과태료도 금감원이나 금융위가 내리는 조치에 해당되고 그 조치에 해당된다면 제재에 해당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음. 그래서 해외점포가 해외 감독당국 으로부터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받았다면 당연히 그것은 보고해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한국산업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은 전부 다 보고를 하고 있음. 그래서 한국산업은행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음. 그리고 세 번째,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의무 위반과 관련해서 보고 위반은 기관주의에 갈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음. 물론 주장한 대로 기관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기관경고에 먼저 해당되어야 되고 거기에서 참작사유가 있었던 기관주의로 가게 되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17년도에 한 번 검사를 했음. 한국산업은행에 대해서 검사했을 때 동일한 유형의 지적이 있음. 20% 지분증권 초과 담보대출 보고를 안 했는데 그때는 처음으로 적발이 됐고 건수가 35건에 불과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제재는 하지 않고 경영유의로 지도를 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다시 동일한 유형이 165건이나 발생을 했음. 그리고 관련 영업점도 26개에 달하고 있음. 전횡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경영 전반에 영향이 있다고 보고 있고,

무엇보다도 감사원에서 금감원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과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나 기관주의 조치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음. 당연히 법이나 규정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왜 그런 조치를 안 하느냐고 해서 하도록 저희한테 요구를 했음.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그리고 연대보증 관련해서 진술이 있었는데 입법취지는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보증서에 의해서 담보된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서 한다는 것을 차주에게 분명히 명확하게 알리도록 하는 취지라고 생각함. 그런데 은행이 자기 내규에는 그렇게 반영했지만 대출약정서에 안 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임. 이것은 결국 상대방에 알려야 되는 것이지, 자기들 내부규정에만 하면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선처를 바란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이것이 고의가 없었고 실제로 대리변제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 산정할 때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산정했음. 그래서 진술인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이미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 지금 한국산업은행 측에서 다투는 내용 중에 하나가 금융위의 유권해석에 대해서 부당한 해석이라고 얘기하고 있음. 2가지 유권해석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면 좋겠음.
- (보고자) 지금 산업은행의 주된 주장이 특수목적법인 SPC의 발행주식 담보대출과 관련해서 “이것을 굳이 보고의무 규제 대상으로 삼아야 되느냐? SPC 발행주식 담보대출은 보고의무 규제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는 주장

을 하고 있음. 동 건 관련해서는 2016년도에 현장건의과제 유사한 질의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은행과에서 소규모 비상장 회사라든지 SPC의 경우에도 당연히 동 보고의무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이 있었음. 그리고 당시에 적시했던 이유는 SPC인 경우에도 시장상황 변화에 따라서 담보가치 변동에 노출이 될 수도 있겠고 그 경우에는 은행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SPC 여부와 상관없이 동 보고의무 대상으로 삼는 것이 적합하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현 상황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그래서 동 건 관련해서는 금융위 은행과의 입장은 크게 변동이 없음.

- (위원) ○위원님께서 안전검토소위원회를 참석하셔서 양쪽 의견을 들어보셨을 텐데 일부는 금감원 특수은행검사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법적인 문제 관련하여 의견을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지?
- (위원) 일단 안전검토소위원회에서는 한국산업은행 쪽에서는 오늘과 같은 의견개진은 전혀 하지 않았음. 그래서 오늘 저희가 처음으로 받게 된 것임. 아까 한국산업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법령 전체 체계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했음. 예를 들어 한국산업은행 쪽에서는 MOU 같은 것과 과태료·과징금을 같은 차원에서 얘기를 하였음. 그런데 법체계에 있어서는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도 과태료나 과징금은 저희가 운영하는 행정제재의 하나로 너무나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은행의 이해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음. 그리고 금융위

은행과장님이 얘기하셨지만 SPC에 대한 부분도 이미 저희가 확립된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음. 신디케이티드론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미 20%를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서 신디케이티드론 보다는 주식에 대해서 공동의 질권을 담보로 징구하게 되는데 신디케이티드론에 대하여는 각 회사들의 지분비율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음. 따라서 모든 신디케이티드론에 참여한 금융기관들은 20% 초과부분에서 다 보고 하라는 것이 저희의 입장임. 따라서 그 부분도 아무 근거가 없다고 생각됨. 그리고 아까 기관경고에 해당할 때 기관주의를 내린다는 것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에서 적절하게 적시했듯이 과거에 이와 유사한 사안이 있었고 이번에도 동일하게 위반이 있고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조직적으로 위반이 일어났기 때문에 기관주의로 나가는 것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위원) 법적인 문제를 듣고 싶어서 위원님께 여쭙었음.
- (위원) 절차적인 측면 관련해서 가급적이면 안전검토소위원회에서 의견진술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음. 그런데 가끔씩 이렇게 안전검토소위원회 단계에서의 의견진술보다는 금융위 정례회의에 참석하여 진술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음. 이해관계인의 진술등과 관련하여, 앞으로도 안전검토소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3) 보고안전 심의

□ 보고안전 제34호 『'20년 6월말 기준 (주)한국씨티은행 등 4개 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정기 적격성 심사결과 보고』를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20년 6월말 기준 한국씨티은행 등 4개 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정기 적격성 심사결과를 보고하는 내용

- (위원) 인터넷은행이 처음 출발할 때 인터넷은행에 대해서는 은산분리를 완화해 주고 대주주를 지원해 주는 요건에 대해서는 많이 강화를 했었음. 그런데 이번 건을 보면 대주주에 대한 대출 건이 발생했다가 나중에 회수되면 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없어지는 것 같음. 이것을 악용한다면 단기적인 자금유통 수단이 될 수 있음. 이런 경우에 단기적으로 이용하고 나중에 얼른 회수하는 쪽으로 악용한다면 저희들이 처음에 제도를 만들었던 취지와 어긋날 것 같음. 과징금을 검토한다고 했었는데 과징금 정도 가지고 이것이 시정이 될지,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보고자) 현행법상 위반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억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함. 5억 원 이하의 형사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되면 당연히 대주주 적격성 요건에 위반되게 됨. 그렇게 해서 결국 고의성이 있거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열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서 고의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러한 적격성 요건에 어긋나게 되는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다만, 이 건의 경우 경미하다고 봤기 때문에 저희가 요건충족명령은 부과하지 않지만 이번에 검사를 했기 때문에 검사 후속조치 일환으로써 재발방지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확실히 갖추도록 지도할 예정임. 아무래도 신설은행이다 보니까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 특히 특수관계인인 임원에 대한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를 체크하는 시스템이 부족했던 것 같음. 대주주로서 임원이 되면 임원을 선임할 때 이런 대출 여부를 확인하고 그것이 있다면 해소시키도록 하고 통보를 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없었던 점이 드러났고, 그 부분을 확실하게 갖추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음.

- (위원) 저도 같은 취지에서 시스템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음. 결국 내부통제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음. 그런 것을 넘어서 추가적으로 재발방지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는 함께 보면 좋겠다는 생각임.
- (위원) 아까 두 분 위원님들께서 무엇을 적시하신 것이냐면 이 조치에 대한 요건 사실을 저희가 나중에 계속 의미하게 될 텐데, 아까 그것은 신용공여를 해소하였기 때문에 요건충족명령을 부과실익이 없다고 쓰여 있고, 이런 상태로 나가면 시장에 굉장히 오해와 혼란을 야기 시킬 여지가 큼. 사실 이것이 중대한 위반일 때는 요건충족명령을 내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단정적으로 표현하면 안 될 것 같음. 그래서 이 문구도 같이 수정해 주셨으면 함.
- (보고자) ‘안전 요약 보고서’의 문구 중 일부가 착오로 인해

수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건에는 신용공여가 이미 해소되었고 의도적인 위반행위로 보기 곤란하며 위반금액도 적은만큼 요건충족명령은 부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표현으로 이미 수정 반영되어 있음.

○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 보고안건 제35호 『(주)○○○○ 등 21개 회사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심사 결과 보고』를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주)○○○○ 등 21개 회사에 대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심사 결과를 보고하는 내용

○ (위원) 이 건은 보도자료가 나가는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보도자료 준비되어 있음.

○ (위원) 처음에 언론에서 온투업 등록이 하나도 안 된다고 비판적으로 썼던 부분에 대해서는 7개사에 21개사가 추가되니까 그 부분은 해소가 되었는데, 그다음에는 여전히 등록이 안 되는 곳은 어떻게 되느냐고 의문점을 제기할 것 같아서 준비되는 내용도 다 같이 보도자료를 통해 알려져 시장에 불안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음.

○ (보고자) 일단 40개사가 등록신청이 되었는데 이번에 이것까

지 합하면 28개사가 등록되고 9월에 추가로 등록이 가능할 것 같음. 그리고 나머지는 수사 중으로 심사중단이 되었는데 그것은 시기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이번에 등록이 안 된 곳은 투자자보호 방안이나 이런 것을 같이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함.

○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 보고안건 제36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승인후 초과소유요건 충족 여부 심사결과 보고』, 제37호 『금융투자업 인가 등의 심사 진행상황 중간 보고』, 제38호 『보험업 예비허가의 심사 진행상황 중간 보고』를 일괄 상정하여 서면보고함

○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1년도 금융위원회 제15차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6시 45분 폐회)